

## 제121회 임시국회 지상 중계

국내 일간지에 보도된 임시국회본회의 양돈정책과 관련된 대정부질문과 농수산상임위원회 질의답변요지를 모아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 축산법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한채 다음 국회로 넘겨진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경제부문 대정부 질문 답변 요지

- 질문** 기업양돈 규제하는 축산법개정안 마련할 계획 없는가?
- 답변** 기업양돈이 부업양돈 위축시키는 현상 막도록 할 것임.

김완태의원(국민) = 복합영농은 이제 바닥이 났다. 사료값은 20% 이상 올랐는데 소 돼지값은 폭락하고 있다. (동아일보 3월 5일자)

정시채(민정) = ▶ 기업양돈가의 사육두수를 규제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동아일보 3월 6일자) ▶ 축산물소비증가에 대비한 사료의 자급화대책을 설명하라 (매일경제신문 3월 6일자) ▶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급사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돼지의 경우 1,000마리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123호나 되며 특정인은 32,0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다. 일반양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양돈가의 사육 마릿수를 규제할 축산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 (조선일보 3월 7일자)

박종문농수산부장관답변 = 앞으로 정부는 축산소득을 농촌으로 환원한다는 전제아래 기업돈이 부업양돈을 위축하는 현상을 막도록 할 것

이다. 민정당이 제출한 축산법개정안심의때 이를 반영토록 할 것이다. 현재 1천두이상 기업양돈가는 123호, 1만두 이상은 6호이다 (한국일보 3월 7일자)

### 농수산위 질의답변요지

- 질문** 축산진흥을 위한 기본시책방향을 밝혀라
- 답변** 기업양돈은 수출과 육가공에 주력 토록 유도

강보성의원(민한) = ▶ 수입자유화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농산물은 어떤것이 있는가. 이로인한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농외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가공공장을 언제 설치할 것인가. (한국일보 3월 14일자) ▶ 모재벌이 양돈에 까지 침투한 것은 기업도의 상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3월 14일자)

안병규의원(민정) = 정부는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당초 16만두를 수매키로 했으나 수매실적은 25,000두에 불과했다. 이는 수매가격이 실제 시장거래 가격보다 낮거나 수매가가 생산비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3월 14일자)

정희동의원(민정) = 국내사료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쇠고기는 부족한데 반해 도입사료로 키우고 있는 돼지는 과잉되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진흥을 위한 기본시책방향을 밝혀라.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3월 14일자)

박종문 농수산부장관답변=부업 양돈농가의 수입증대를 위해 기업양돈농가는 수출과 육가공에 주력도록 유도하겠다. (매일경제신문, 3월 14일자)

## 축산법 개정안 제출 배경과 다음 회기로 넘겨진 배경

민정당 민한당의 연계전략으로 풀이  
민한당 보완할 부분 너무 많다고 주장

민정당은 6일 부업으로 돼지등을 기르는 농가가 시장 출하량의 과다에 의해 가격 폭락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 축산업자에 대해 사육량 및 출하량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병규 의원 등 81명의 발의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자들은 등록 또는 허

가를 받도록 하여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는 이들에게 가축의 생산, 사육 및 출하의 조절과 축산물의 비축, 판매 및 처리 방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선일보는 3월 8일자 기사로 개정안 제출 배경을 보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 3월 20일자 「기자수첩」란에 의하면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배경을 여당 의원들은 민한당측의 연계전략이라 밝히고 혹시 재벌기업의 로비에 걸려 개정안이 통과 못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를 미리 해명했다고 언급하면서, 민한당측은 이 법이 3월 6일 제출되었음을 들어 불과 열흘도 안되는 회기내에 통과시키기에는 민정당안을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특히 일정 두수를 넘는 부분에 대해 사육제한 또는 육가공부문으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아니라 이 법안에 아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월간 양돈 구독 안내

본회는 국내 유일의 “월간 양돈”지를 발간 양돈 사업의 정보, 사양기술, 질병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할 뿐만 아니라 양돈인의 대변자로서 양돈 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간 연륜이 짧아 부족한 점이 많으나 전국 양돈인들의 성원으로 보다 향상된 월간 양돈지로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월간지 구독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소액환을 끊어 각 도협의회 및 지부로 보내주시면 송료는 본회가 부담하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년 구독료는 30,000원이며 구독기간 중 인상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각 협회 및 지부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753-3428 또는 778-5540, 그리고 778-5450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